

지방소멸 절벽 앞에서 드리는 고언

단 상



박성복

경남미래정책교육대학 대표이사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주빈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30여년이다.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보면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거대한 인구 절벽 앞에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세입 기반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살아남을 지방정부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문제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여전한 중앙부처에 집중돼있는 현실이다. 주민이 선택한 단체장이 지역 행정을 총괄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 증진을 책임져야 하는 병설상부한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행정의 하위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고 각종 사무를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넘겨지면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권한은 이양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정책 집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민원은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고, 성과는 중앙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된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지방재정 위기가 정적으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건 아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보다 표심을 의식한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는 지방정부 내부의 방만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체장이 '민심을 살피는 일'과 '다음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들이 취임 직후부터 백년대계에 일각한 지역 사업보다는 지지 세력을 위한 단기적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적지 않다.

임기내 완공이 불가능한 대규모 토건 사업을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이거나 실용성이 불투명한 대형 축제, 전시성 시설, 일회성 중심성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

철저한 감시로 지방정부 예산 낭비를 차

단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이러한 방종과 포퓰리즘 행태에 전적하는 모습이다. 지방재정은 주민 모두가 피담홀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 앞장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아랑곳 않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관계를 타협하며 혈세를 낭비할 때 재정 파탄의 고동은 고스란히 현재를 사는 주민과 미래 세대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 한계와 내부적 방만이 얹혀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

속 제정이나 조직 축소 등의 미봉책을 넘어, 제도 자체의 관을 갈아엎는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연임이 허용되는 현재 구조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취임 순간부터 사실상 재선 운동에 몰입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은 안고 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장기적 안목의 인프라 투자나 필수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환심을 살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임기 말로 갈수록 행정의 책임성이 약화되거나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행 제도를 절대 선으로 맹신하지 말고, 단임제 논의와 함께 주민의 삶과 지방의 생존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선을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재정을 끌어다 쓰는 무책임한 관행은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고, 예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가 따른다'는 분리의 원칙 위에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지방소멸을 입버릇처럼 격정하면서 정작 낡은 제도와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방이 무너진 중앙정부 역시 온전한 답보할 수 없다.

이들 위해 대표를 위한 일회성 행사나 현세를 낭비하기보다는 주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필수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집중해야 한다.

김승원과 김용민·장경태도 금배지 떼라



아 침 헛 살

고 하 승 주필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술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동석했었다는 폭로가 주기로 터져 나왔다.

또 김승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기 전날 추가 의혹을 제기한 정지 보좌관을 직접 만나 2시간 동안이나 사건을 꾸미기 위해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김승원은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직 보좌관은 그 자리에서 김승원에게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한 탄원서에 담긴 추가 의혹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의혹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라'라는 최후통첩을 했고, 결국 김승원은 성추행 의혹을 추가 폭로가 두려워 그다음 날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탄원서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김승원 측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김승원의 나마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약 청탁 의혹 등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형사사건이 남아 있다. 이른바 '오빠 료비'에 의한 신약 청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재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 전에 김승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그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민석 의원은 김승원에 대해 '불수룩 잘 된 인사'라고 극찬했던 사람이다.

만일 탄원서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되기 전 민주당에 먼저 제보했거나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의 추가 의혹을 인지하고 고도 그런 말을 한 셈이다.

사실이라면 김민석 대표는 김승

원이 추악한 행위를 알고도 "보편 불수룩 잘된 인사"라며 그 사실을 은폐하려던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 대표가 공범인 김승원의 금배지를 떼는 것에 민주당은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 가련한 것은 성추행이 벌어진 술자리에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동석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보좌진이 성추행이라고 느꼈을 정도면 추행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김용민)라거나 "처음 듣는 얘기"(장경태)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인사전문위원이었던 김용민의 의안은 일에 게거품들 몰고 김승원을 맹렬히 옹호했던 사람이다. 그 당시 현장에서 성추행을 제지하지 않은 성추행 방조범이라는 점도 문

제의자만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그들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며 옹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장경태 의원은 이미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감정에 송치돼 수사를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따라서 김승원은 물론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줘야만 하는데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아들이 그걸 포기해서 안 된다. 제아무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호응을 끌어낸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김승원의 사퇴를 끌어낸 것도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그의 임명을 원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 장경태 의원의 금배지를 때려 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 고

이천의 미래를 위한 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길

이천시 수도과 상수시범장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도로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물이다.

그래서 수도시설은 도시가 다 만들어진 뒤 따라가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하는 기반시설이다.

지금 이천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고, 역세권에는 일거리를 주거,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고, 필요한 물의 양도 함께 늘어난다.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수도계획(水道計劃)')에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공동주택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필요한 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취수장과 정수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수도계획에는 향후 기업 유치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물 문제는 단순히 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천의 산업과 미래 성장에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현재 이천정수장은 하루 6만m³의 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천시는 앞으로 이를 하루 10만m³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남한강에서 물을 가져오는 취수시설도 하루 6만3000m³

에서 11만m³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하루 4만m³의 수돗물을 더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의 양만 늘린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남한강에서 가져온 물은 긴 수도관을 따라 이천정수장까지 이동한다. 이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없다.

기존 이천시 도수관로는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누수 사고도 반복돼 왔다. 그래서 이천시는 새로운 관로를 하나 더 만드는 '도수관로 복선화'를 계획하고 있다. 한쪽 관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관로를 통해 물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수도계획에서도 기존 관로의 노후화와 사고 위험을 고려해 복선화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서로 연결하는 비상 물량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을 단순히 '수도관 공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시의 길을 여는 일이려면, 수도시설을 준비하는 것은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물길을 여는 일이다.

수도시설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고, 물을 가져올 시설을 만들고, 정수장을 늘리고, 수심km의 관로를 설치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가 성장한 뒤 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천시가 2040년을 바라보면 수도시설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계획은 경제 인구와 도시개발을 예상하고 필요한 물의 양을 미리 계산해 수도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장기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물이어야 하고, 이전에 새로운 시민이 들어와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물이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대표 (02)3676-2114	국무신청 (02)2926-0217
편집국 대표 (02)3676-2114	FAX (02)762-8223
정치·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2926-0392
사회·수도부 (02)2926-0314	편집부 (02)2926-0242
총무국 (02)2926-0217	영입국 (02)2926-0164 FAX (02)762-8223
광고문의 (02)2926-0164	윤리관 (02)3675-7955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0(여의도동, 국회VF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부 800원

'경남 우수 브랜드 쌀' 4년 연속 수상 영호진미 합천쌀

